

### 전북특자도 특별법 '의생명산업 거점화 특례'

# 라이프·디지털 헬스케어 허브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10대 핵심특례를 살펴보는 일환으로, 친환경 신약관망 특구 지정·육성 특례에 이어, 이번에는 의생명산업 거점화를 위한 특례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수도권 집중 연구중심 병원도 전북특자도에 설치 가능

하는 경우 전북도와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북자치도 내에서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특례에 담았다.(제29조 제1항) 또한 가천강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연구중심병원 10개소 중 대부분이 수도권 소재 병원들로 지정되어 있어, 비수도권인 전북자치도 내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시켜 지역병원의 연구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으며(제29조 제2항), 전북자치도 내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추가 지정해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특례도 포함됐다.(제29조 제3항) 특히, 이와 함께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규제 해소, 사범사업의 실행이 필요함에 따라 특례를 통해 사범적 헬스케어 특화자구를 도입하는 조항을 담았다.(제29조 제4항~제7항) 최근 반려동물 양육기구의 증가로 동물용의약품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신약 개발 시효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험·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실정이며,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신약 개발로 인한 부차 위험성 해소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산업

의 진흥 특례에 재정적 지원 등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실었다.(제33조) 전북도의 풍부한 바이오자원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적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바이오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특례도 개정안에 담았다.(제34조)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글로벌 생명경제 핵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의생명산업 거점화 특례를 통과시켜, 전라북도 신산업의 생태계를 확산하고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향후 전북자치도 인민비자유자 신설 등 외국인 유입 정책 등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민관한의 광역 이양 특례'에 관한 내용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민주 전북도당, 추석 맞아

### 부안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 익산 을)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전북도당은 이를 위해 지난 23일 오전 11시 부안군 상설시장 일대에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마련해 침체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을 비롯한 지역위원회 당원 20여명과 전북도당 당직자들이 함께 참여해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굴욕적인 일본외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은 "가장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굴욕적인 일본 외교정책을 이어가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방류를 방관하는 행태로 자국의 수산업 종사자들을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면서 지금이라도 핵오염수 무단 투기를 저지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당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마치고 부안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종사자들과 시설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신활력산단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협약. 전북도와 고창군은 25일, 고창신활력산단단지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 관련 삼성전자주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왼쪽부터, 김관영 도지사,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심덕섭 고창군수)

## '日 14개현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2358건'

### 민주 윤준병 의원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한데 이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14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축수산물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같은 기간 수산물 방사성 물질 조사 결과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 역시 200건으로 집계되면서,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및 농축수산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일본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인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후쿠시마현 및 인근 14개 현의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무려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8개 현 중 후쿠시마현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검출 건수가 966건(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야기현 487건(20.7%), △군마현 323건(13.7%), △도치기현 200건(8.5%), △이와테현 90건



(3.8%), △이바라키 38건(1.6%), △지바현 15건(0.6%), △아오모리현 0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에서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총 2119건으로 전체의 89.9%에 달했다. 또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을 제외한 인근 6개 현에서의 농축수산물에서도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본 아키타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건수는 102건(4.3%)에 달하는 등 인근 6개 현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은 23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한 8개 현 외 인근 지역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도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수산청은 후쿠시마현 및 인근 현에서의 수산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 수산물 방사성물질 조사 결과 역시 방사능 세슘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이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를 초과하는 수산물 200건 중 100백크렐 초과 300백크렐 이하로 검출된 수산물은 185건으로 전체 92.5%에 달했고, 300백크렐 초과 500백크렐



## 무주군의회 임시회 폐회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지난 2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나흘간 이어진 제302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특별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공영주차장관리규칙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계속비 사업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울 제2회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은영)의 심사결과 3,370만원이 삭감된 5,773억3,707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호성 전 전주시의회 의원(사진 가운데)이 2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부 국회의원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진영논리 패착 극복해 나갈 것"

### 김호성 전 전주시의원, 민주 전주부 국회의원 출마 선언

김호성 전 전주시의회 의원이 2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2대 전주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고경관념과 진영논리의 무서운 패착을 극복하고 양심을 근본으로 하는 변화와 도전정신으로 민생을 대변하겠다고 역설했다. 먼저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1인당 1년 예산이 40억이 넘게 국민 혈세의 소모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 국회의원 300명 의원 정수를 단계별로 50명씩 줄이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서민들이 기본부채에 고금리로 민생고 겪으면서 가장 힘들어 한다. 이자금리를 인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 그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에 필수적인 시간

들을 철저히 파헤쳐 해소함으로써 이른 시일 내로 통합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무산된 경전철 사업의 재추진으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현재까지도 대중교통이 버스과 택시밖에 없는 전주시의 교통난 해소에 필수적이다"고 경전철 사업 재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지역 내 철새, 브로커, 협잡꾼 등 정치 브로커들이 민생을 위해 일해보겠다는 신념이 사라져가고 당리당리파 진영논리에 따라 민폐를 끼치기 있다며 정치 브로커 척결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김호성 전 전주시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몰려서도 양심으로써 쓰러져가는 민생을 극한의 각오로 국민과 함께 손잡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욱 기자

## '2분기 중기 비은행권 연체율 4.61% 급증'

### 민주 한병도 의원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작년 2분기 1.95%에서 올해 2분기 4.61%로 1년새 2.66%p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 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1.95%에서 3분기 2.20%, 4분기 2.68%, 2023년 1분기에 4.28%로 급격히 상승했고, 올 2분기에는 4.61%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연체액도 2022년 2분기 9.28조원에서 2023년 2분기 23.99조원으로 1년새 14.71조원(159%) 증가했다. 이 시기 중소기업의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0.24%에서 0.43%로 소폭 상승했고, 연체액도 230조원에서 438조원 약 2조원 가량 늘었다. 한편 같은 기간 대기업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매년 0.1% 미만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은행권 대출 또한 연체액, 연체율 모두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한 의원은 "최근 미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등 긴축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진단하며,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비은행권 부실 관리를 위한 컨터전시 플랜이 있는지 묻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비은행권 연체율 상성이 대규모 금융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 농경지 등 41만평 해제"

### 민주 안호영 의원 "국무조정실 등과 설득해 이뤄낸 성과"

안호영 국회의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전북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개인 소유 토지 등 4만평이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올해 1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5월 덕유산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가 발표되었고, 현재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 내 개인 농경지 해제를 위해 무주군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하두마을 뒤편, 관동마을 뒤편과 삼곡리 농경지이고, △적성면은 내창마을 뒤편과 치목마을 뒤편이 포함되었다. 안성면은 봉안

마을 뒤편이 해제되었다. 또한, 마전마을의 경우 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마을지구로 용도변경이 되어 주택 신축 등 개발이 가능해졌다. 안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선임됐고,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환경부,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부처협력을 통해 무주군민의 숙원 과제였던 덕유산 국립공원 내 농경지 해제를 추진해왔다. 무주군은 국립공원에 편입된 무주군 농경지 등 1.5㎦(45만평)를 환경부에 해제 요청했고, 올해 5월 덕유산 국립공원 변경 고시 1.3㎦(41만평)가 해제되었다. 이는 무주군 요청 지역의 약 90%가 해제된 것이다. 실제로 덕유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사유면적이 너무 넓어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주는 너무 허다해 손대지 못하고 부당함을 절감해 매각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지역개발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